

제 4강 제국 서문

◆1교시: 네트워크 권력으로의 제국

▲저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도표

지난번까지 한 거는 일단 방법론, 4부 1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자들이 제국이라고 하는 테마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설정한 입장, 그걸 버추얼개념, 잠재성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는데요. 버추얼이라고 하는 게 지금 도표에서 보면 여기에 나타나있는, 이 지점이겠습니까(버추얼). 근데 이것들이 전부 현실적인 것, 어떤 액추얼한 것으로 나타났을 때 띄게 되는 현상들이 쪽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 도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에서 보면 403페이지에서 409페이지까지를 대략 스케치한 도표인데요. 왜 이거를 먼저 제시하는가 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 챕터들에서도 도표를 가지고 머릿속에는 도표가 이미 저자들은 들어있습니다. 이 도표들이 각각의 장면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는 그러한 순서로 책이 씌어져 있거든요. 쪽 가다보면 도표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미 저자들은 처음부터 이 도표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를 머리에 담고서 이후에 행보를 걸어 나가시면 한결 이해하기가 쉽다는 뜻인데요.

방법론적으로는 다중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세계질서의 잠재적 힘들이 현재(이게 피라미드죠) 피라미드적 구조에 어떻게 포획되어 있는가. 이 현실적인 것들이 잠재적인 것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거를 서술하는 방법으로 글이 짜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국 서문을 하기로 했죠. 꼼꼼히 읽어볼 생각이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서문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가는지를 조금 있다가 끝날 즈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문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입문을 읽는 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 서문에는 전체 내용이 다 담겨 있거든요(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서문을 이해하게 되면 이 책 전체를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터인데, 물론 그게 계략적으로 커다란 골격을 이해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일단 서문이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서문을 읽는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지도그리기

맨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제가 갖고 있는 수첩 중에서 세계 지도죠. 아주 흔히 보는 세계지도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하나의 우리 세계의 실상이라기보다는 리얼한 것, 실제 존재하는 것에 대한 반영물이라기 보다는 이것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을 여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주관적이라는 거죠. 세계를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당장 경도, 경도가 보면 0도가 여기에 있거든요. 이게 표준이잖습니까. 표준을 의미하는 0이라는 숫자가 영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거기를 제로로 했을 때 다른 것들이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위치를 표시하고 있죠. 이건 기본적으로 영국 제국주의의 세계 이미지죠(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영국을 표준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은 전부 그

것과 맺는 관계 속에서 여기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에 대한 반영물이 아니고 대단히 정치적인 실천행위에 속한다.

그래서 지금 해러웨이 같은 사람은 ,오늘 오후에 해러웨이 강의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게놈 프로젝트 하에서 인체의 유전자적 지도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인체를 사실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지극히 자본 중심적인 입장에서 또 거기에는 남성중심성도 들어가고, 몇 가지 표준적 척도를 가지고 이 세계를 구성해내는 구성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겸손한 목격자』에 보면 나오는데. 지금 이 자체가 하나의 상당히 제국주의적인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이 그림표와는 다른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도에 대한 상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지금은 영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이미 영국 제국주의가 힘을 잃은 지는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적어도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영국이 헤게모니적인 나라였었고, 미국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힘 센 나라도 아니었고, 표준이나 척도를 부과할만한 그런 상태도 아니었죠. 1차 세계대전은 참전도 안했으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도 거의 막바지에 참여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것의 부상, 우리가 마치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미국이 헤게모니를 행사하기 시작한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으레 미국이라고 하는 게 강력하고, 그래서 표준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게 된 때는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국이 어쨌건 미국 이전에 보면 상당히 헤게모니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었는데, 바로 그런 관점이 이 지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지도를 어떻게 그려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당연히 매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과제로 주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지도그리기를 사실상은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inter-state system의 해체

근데 지도를 이 사람들 즉, 저자들, 마이클하트나 네그리 같은 경우에는 현실의 반영물로 보는 게 아니고 대개 적극적인 구성물로 보기 때문에 역학관계로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내믹이죠. 힘들의 관계로 보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버추얼이라고 하는 것이 포획되어 있는 관계들을 꼭 보여줍니다.

예전 같으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펼쳐져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미국이고, 여기까지는 소련이고 이런 식으로(우리가 냉전기만 보더라도) 제 3세계가 있고 등등, 그래서 횡적인 차원에서 국경을 따라 분할된 세계들이 있다고 가정되었었고, 이런 거를 inter-state이라고 국가간 체제라고 불렀습니다(월러스틴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 state들이 이렇게 있고, 이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동그라미 이렇게 휘다면 또 다른 관계가 되겠죠. inter-state system으로서 파악을 했는데, 지금 저자들이 보기에는 inter-state system이라는 게 해체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질 않고, 그림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연합이라거나 기업들 할 때 ‘들’이라거나 클럽이라거나 여기도 보면 다양한 유형의 결합체들이죠.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거나 세계은행이라거나(이런 식으로) 세계화폐기금이라거나 금융기금이라거나 이런 식의 연합체들입니다. 돈이 연합되거나 권력이 연합되거나 사람들이 연합되거나 하는 그런 연합들, 이 연합들이 지금 그림에 상층부에 꼭 차지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나중에 다중에까지도 이어지는 네트워크 권력 개념, 네트워크 파워라고 부르는데요. 네트워크 권력개념의 구성 부분입니다. 권력이 연합한다. 권력이 연합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말이 쉽지. 역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대단히 생소한 것이거든요. 권력은 항상 경쟁하고, 치고 박고 싸우지 이게 힘을 합쳐가지고 협정을 맺고 연합하고 한다. 이거는 우리의 상식에서 보면 부차적인 거지 주요한 게 절대로 아닌 거죠.

▲경쟁과 투쟁에서 연합으로

그럼 제국주의 시대, 지금 지도에서 보여주는 제국주의 시대만 하더라도,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식민지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적대적인 투쟁관계가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민지 국가들과 제국주의 사이의 적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들도 선발 제국주의국, 후발 제국주의국, 이런 출발의 차이, 먼저 제국주의가 됐느냐 늦게 되었느냐의 차이 또 강한 제국주의와 취약한 제국주의의 사이, 이런 사이에서 제국주의들 사이에는 또 경쟁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러스틴이 보고 있는 순수한 국가들 간의 체제이전의 상태에서는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분할, 제국주의 내부의 분할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제국주의들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 방식은 뭐였나요? 제국주의들이 서로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죠? 연합하는 관계와는 달리고개를 흔드는데,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많은 글자가 썩어지고 있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1차 세계대전이라거나 제2차 세계대전처럼 전쟁의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거죠. 그런 전쟁관계가 제국주의들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 방식인데, 그때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아마 19세기에서 20세기 초,중반까지 나오는 기본적인 세계 이미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에도 물론 연합하는 경우는 있었죠. 그래서 연합국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탈리아라거나 일본이라거나 이런 나라들이 후발적 연합을 이룰 때 영국, 프랑스 등등은 또 선발적 연합을 이뤄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연합이 있기는 했으나 연합은 부차적이었다. 바로 경쟁관계, 갈등관계, 투쟁이 일차적인 것이었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우리는 나중에 제국주의의 메커니즘, 그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레닌에 의해서 정식화 되었던 제국주의란 게 대체 뭐였느냐 하는 문제는 다음에 볼 건데, 크게 봤을 때 경쟁과 투쟁에서부터 네트워크로 연합으로의 권력의 이행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저자들이 밝혀내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제국, 네트워크 권력 전체

그럼 여기에 보면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권력을 그려놓은 거죠. 지난번 pouvoir하고 puissance를 본다면, 이게 pouvoir의 구조를, 권력의 구조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지금 최상층에 미국이 있죠? 제일 상층에 미국이 있으면서 미국의 군사적 헤게모니 하에서 거대 국가들의(지금은 G7이 아니라 G8이 되었습니다) 정상들의 회담들, 경제대표자들 즉, 거대자본가들의 클럽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 아래에 IMF라거나 세계은행이라거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같은 금융적, 여기 WTO도 집어넣을 수 있겠죠. 세계무역기구 같은 무역, 이 두 개는 금융에 관한 거고, 이거는 무역에 관한 거고, 이거는 군사에 관한 건데,

이런 재정적, 시장적, 군사적인 네트워크들이 움직입니다.

이 부분을 이 전체가 말하자면 제국입니다. 네트워크 그 권력 전체를 제국이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소문자 제국이 아니고 대문자 제국입니다. 책 표지이기 때문에 Empire로 되는 게 아니라 본문에 보면 그냥 소문자로 일반적으로 써야 될 대목도 대문자로 쓰고 있거든요. 대문자 제국을 이루고 있는데. 이 Empire에 군주층이라고 보는 거죠. 군주제, 이건 스피노자의 한국어로는 국가론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적절한 번역어가 있지는 않습니다(시민론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스피노자의 주권론은 세 개의 구성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군주제와 귀족제와 민주제라고 하는 세 가지 구성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게 역사적으로는 일정하게 진화해 온 걸로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네그리와 하트는 군주제나 귀족제나 민주제가 각각 대체해버리고 끝낸 게 아니라 군주제가 귀족제로 대체되고 귀족제가 민주제로 대체되고 대체로는 고, 중세 혹은 근대로의 이행기 혹은 전근대, 근대 이런 것에 상응할 법한데 이것들이 동시적으로 층화되어서 맨 아래층, 중간층, 상층 이런 식으로 지층화 되어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제가 있긴 하지만 다시 그 위에 귀족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옥죄고 있고, 그것이 군주제로 종합된다고 보이는데요.

철학적으로는 대의한다. 대의의 영역이에요. 민주적 대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뭘 대의하는가? 다중을 대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articulation이라고 해서, articulation이라고 하는 거는 게를 생각하면 됩니다. 게의 다리에 마디들이 많이 있잖아요. 게들은 다 마디마디로, 곤충들도 마디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마디로 결합된 어떤 유기체를 절합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국민국가들이라거나 기업들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마디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부분을 un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uni를 만드는, 단일한 권력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의 권력. 그래서 대의를 통해서 절합을 거쳐서 통합으로 나아가면, 이렇게 층화된 이것으로부터 하나의 단일한 주권이 생겨난다. 주권이라는 건 sovereignty라고 하는데, 이거는 군주권의 준말입니다(그냥). 군주제할 때 군주, 주권의 준말이죠. 군주적 권력이 형성된다는 것인데, 군주란 건 뭐냐 하면, 다양성을 지배하는 하나, 하나의 권력, 일자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명령이 이렇게 분절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단일한 하나의 명령이 관철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권력을 주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민주제는 대의를 하고, 귀족제가 절합을 하고, 군주제가 통합을 해서 하나의 주권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주권형태를 바로 네트워크 권력으로서의 제국이라고 합니다.

▲국민국가들, 미디어, NGO

그럼 제국 속에서 보면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하는데, 미국이라는 국민국가도 있고, 자본가들의 연합체들도 있고, 자본이나 군사적 연합체도 있고, 기업들의 연합체도 있고, 국민국가들의 연합체, 예컨대 아세안이라거나 EU라거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국민국가들의 연합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강한 부분하고 약한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선진자본주의국가들, 예컨대 OECD국가들의 연합체는 여기 놓인다면, 그것으로부터 배제되는 아시아의 많은 지역들이나 아프리카 혹은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민국가들은 하위로 또 내려가는 것이죠. 거기에도 연합들이 존재하지만 그런 식의 하이라키hierarchy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들, 텔레비전이라거나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위성이라거나 이런 것

들이 또 대의적 NGO들의 경우에도 이것이 다중 자신의 조직일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권력의 하나의 마디로서 다중을 민주적으로 대의해주면서 그거를 군주권으로 전달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아마 NGO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은 누구죠? 제임스 페트라스 같은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은 NGO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는데, NGO의 대부분이 처음 발상기와는 달리 지금에 들어와서는(이 사람은 제국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제국주의 권력의 전통 벨트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도 그 쪽에서 받고, 예컨대 환경NGO들 같은 경우를 보면 바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움직이면서 기업의 이윤 실현에서 기업체 이미지를 좋게 해준다거나 때로는 또 환경 요소 그 자체가 자본과 경쟁에서 선진국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도록 될 수가 있잖아요.

예컨대 냉장고의 네온입니까? 프레온, 프레온 가스를 넣도록 규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제3세계권에서 나오는 냉장고들은 수출되지 못하게 되고,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서 결국 선진 자본주의를 편들게 되는 그런 사례처럼, 경제적 관계에서 자본을 편드는 결과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NGO가 현재의 주권 체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을 밝혀내는데 많은 시간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어쨌건 그와 유사한(모든 NGO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NGO들이 이러한 권력체의 일부로 지금 기능하고 있다.

▲네트워크 권력과 다중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삼층, 그리고 삼단식 대체로 나눠보면, 세 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삼층 삼단의 구조로 짜여 있는 네트워크 권력으로 제국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럴 때 다중이라고 하는 게 국민하고 전혀 다른 거죠. 이거는 세계 자체를 무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군주제 중에서 군주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군주국이 다중을 대의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미국의 주권 구성에 투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부시 행정부는 미국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어쨌건 미국은 자국 국민들에서나마 대의된다고 가정하더라도(다중을 대의하지 않지만) 예컨대 IMF라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대의를 하지 않죠. 즉, 이것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에 UN 같은 거를 놓을 수가 있겠는데, UN 같은 경우에도 선출되지 않습니다. 자기내부에서 예컨대 일국의 국가의 파견자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선출행위를 하지만 그 파견자를 우리가 선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임의단체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군주층 같은 경우에는 아래 바닥으로 내려오면 민주적 성격이 있지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의적 성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제 맘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폭력적으로 되고, 대의란 게 우리는 불만족스럽고, 상당히 문제적인 정치적인 행위 양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성이 개발해낸 하나의 진보적 정치양식인데, 그것마저도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군주적인 거고, 그래서 독재적인 방식으로 사실상은 방식으로 움직이는 층으로 되어 있다.

◆2교시: 제국 서문

▲local, national, global

그러면 서문으로 한 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권력이 주권이라고, sovereign power라고 쓸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global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global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용어가 됐죠. 한국 같은 경우는 1993년에 김영삼 정부는 아예 국정과제로서 세계화라는 거를 내걸 정도였고, 그 때에 김우중 씨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라고 하면서 기업화가 화답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권력과 기업 사이에서 globalization이 추진되게 되는데. 이 global하고 대립적으로 사용되는 게 local이죠. 지역적인 것, 그러니까 이거는 장소적인 거를 의미합니다. 근데 global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라고 하는 것의 표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공간적입니다.

장소의 영어는 place고 공간은 space인데, place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짚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저기 이런 식으로. space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집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어디와 어디 그 사이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지점을 가지는는 않습니다(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들뢰즈에 가면 다시 space가 공간 개념 내부에 잠재와 현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면서 공간하고, 공간이 달라지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멈추도록 하죠. 하여튼 장소와 공간을 우리는 일단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보면 인류라고 하는 것이 장소적 존재로서 주로 살아왔죠. 장소적 존재로 쪽 진화해왔었는데, 이 장소적 존재가 장소를 떠나서 탈장소화 하는 계기가 national에서 주어집니다. 이거는 일국적, 이렇게 번역이 되죠. 혹은 민족적, 국가적 그렇게도 번역될 수가 있겠는데, 국가라고 하는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마을이라거나 이런 것이겠는데요.

국가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장소에서 벗어난 어떤 정치적인 공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거기에는 장소성도 분명 있죠. 지칭할만한 영토성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현재로는 남단을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건 그 영토로 환원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삶의 정치적인 조직공간이죠. 특정한 조직공간으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들뢰즈식 언어를 빌면, 국가라고 하는 거는 지역적인 것에 비하면 훨씬 탈영토적인 것이죠. 탈영토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 위에 특정한 유형의 정치적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게 근대성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전근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근데 global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로부터의 한 걸음 전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national이라고 하는 거는 장소성에서부터 벗어나면서도 정치적인 구성을 장소성에 묶어놨잖습니까. 그게 국경이죠. 국경이라고 하는 장소성에 묶어놨는데, 우리가 그 걸 지나가려면 통과증을 내야 되는 것이고, 이 국경적인 것을 제거하면서 발생하는 보편 공간, 이게 global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local에서 national로 national에서 global로의 정치적 구성의 어떤 진화가 목격된다. 그러면서 최초로 이렇게 씁니다. “제국은 바로 우리의 눈앞에서 물질적으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formal과 material

네그리에서는 두 개의 단어가 항상 구분 되면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material하고 formal인데, 헌법의 경우에도(material constitution), 그 다음에 formal constitution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formal constitution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문헌법으로서 1조 1항, 거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서 나온다. 이렇게 규정된 헌법 이죠. 이 헌법이 formal constitution고요.

material한 constitution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삶의 실재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인데, 지금 이것하고 이것 간에는 때론 긴장되고, 때로는 반영관계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수렴되고, 때로는 배치되는 그런 다양한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네그리 사상에서 중요합니다.

들뢰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machine이라고 불렀고, 이것을 sign이라고 불렀어요.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약간의 상이성은 있지만, 기계체제하고 기호체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그런 의미에서 material입니다. 물질적으로 모습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의 formal한 것, 이 form 있죠. form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바로 제국이라고 하는 책은 formal한 차원에서 물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제국 체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안에 물질이 담겨있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어쨌건 기호적 방식으로 제국을 설명해 내는 것이 자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경향을 개념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제국이라는 책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

▲경제, 문화, 주권의 지구화

그러면서 global이라고 하는 게 작동하는 몇 가지 차원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경제,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주권, 세 차원에서의 globalization이에요. 단합한다는 거죠.

경제적 차원에서의 지구화, 이것은 세계시장의 구축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문화적 차원에서의 지구화, 이것은 다양하지만 예컨대 인종주의의 변형이 나타납니다. 인종주의가 이런 제국주의 시대에는 피부색에 의해서 갈라지는데 흑, 백 이런 식으로 갈라지지만 문화적인 인종주의가 나타나면서 예컨대 한국 같은 경우는 강남사람은 자기네들의 일종의 문화적 인종주의를 주장하잖아요. 우리가 피부색이 같아도 너하고 나하고는 종족이 다르다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서구 선진국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컨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다른 사람들을 피부색이 달라서가 아니라 아예 다르게 취급하려고 하는 거죠. 피부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말레이시아 사람이라거나 네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외계인 취급하듯이 하잖아요. 그런 문화적 인종주의가 출현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정치적 영역에서의 지구화, 그거는 지금 우리가 많이 설명한 것처럼 과거에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축되었던 것들이 흐트러지면서 자본과 권력의 다양한 연합체들이 위계화의 기초한 네트워크 권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대상영역은 global한 것이다. global을 꼭 뭘니까. 영토의 양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적 조직을 생각해

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bio-politic 개념이 제대로 이해가 되거든요. bio-politic 개념이 global을 통해서 바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합니다. global을 땅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bio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삶이라고 하는 게 안 들어오게 됩니다. 이 문단에서 의문 나는 게 있나요? 넘어갈까요?

▲지구화에 대한 태도들

우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지구화에 대한 태도입니다. 지구화에 대한 태도들이 다양한데, 여기에서 찬양과 찬성하는 경향하고, 한탄하는 경향, 그 두 개를 극단적으로 대비시켜놨어요. 그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구화에 대한 네그리나 하트의 태도는 찬성이나 반대냐의 양분 논리에서 일단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지구화의 관계를 맺는 게 유효 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지난번에 버추얼하고 액추얼의 관계를 말을 했는데, 버추얼이 액추얼로 되는 게 무조건 부정적인 현상만은 아니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좋냐 나쁘냐 하는 가치적인 문제에서 일단은 벗어나 있습니다. 나중에 윤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설정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좋냐 그르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힘이, 전체가 다 리얼한 힘인데, 실제적 힘이 버추얼과 액추얼의 분화, 미분화를 통해서 운동합니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의 실제적 힘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요약방식이다. 라고만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식의 액추얼한 것들의 분포로서 잠재적인 것들의 힘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두 가지 경향을 다 갖고 있는 거죠.

하나는 이것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힘을 표현할 때만 액추얼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의 표현이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게 이것의 잠재력 전체를 표현 바깥으로 드러내서 열어젖히는 그 폭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역사적으로 제한된다는 거죠. 그게 갖고 있는 잠재력을 몽땅 다 한꺼번에 드러내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제한 속에서 이 힘이 바깥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힘은 어떤 형태로건 봉합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의 가능성이 컨테이너 박스에 갇히듯이 봉쇄된다는 겁니다. 즉, 봉쇄되는 방식의 표현이다. 어떻게 보면 모순적 진술이죠. 가치적으로 보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표현과 봉쇄, 열림과 닫힘, 열면서 동시에 닫는 거, 이게 액추얼의 기능이죠.

▲생성과 부패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dynamic의 관점에서 보면, 역학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static이라고 하는 거는 정력, 운동이 멈춘 상태에서의 힘 관계를 따진 거고, 다이내믹은 움직이는 상태에서 힘 관계를 따지는 동역학이고 정역학입니다(이게). 다이내믹 과정에서 따진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것이 가만히 있는 상태로, 글자로서 가만히 있잖아요. 기호는 항상 죽이죠. 멈추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써놓은 것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내부로 들어가면 분필가루가 막 미시적 운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태로 다중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건 끊임없는 역동이기 때문에 현재 나타난 모든 표현들은 끊임없이 이것들, 실제로서의 다중, 그 잠재력으로서의 다중과 합치했는가 싶으면 괴리되는 그러한 역동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미 이게 현실화되고 나면, 현실화되는 순간 바

로 남아버리는 거죠. 이걸 맑스의 아주 고유한 생각입니다.

공산당선언에서 맑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단단한 거, 이거는 매순간 녹아내리는 것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녹아내리지 않는 단단함은 없다는 게 맑스의 기본 생각이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아주 단단해 보이지만 그건 끊임없이 해체되는 과정 속에서만 단단한 걸로 나타난다는 건데,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단한 삼층 삼단의, 물론 지금 써 놔가지고 꿈쩍 안하고 있지만 일본일초도 가만있지 않고, 이것들이 끊임없는 역동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자기 자신을 이것에 부합하게끔 재조직하지 않고는 자기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421페이지에 생성과 부패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4부 2장입니다. 그때 부패라는 말은 뭐냐 하면, 가치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막 썩어서 나빠지고 썩 보기 싫게 되고 그런 말이 아니고 바로 해체과정이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붕괴의 과정, 끊임없는 해체의 과정, 생겨나면서 동시에 해체되는 거죠(부패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corruption이라고 하는 거를 가치론적으로 용어를 읽어버리면 마치 저자들이 매우 도덕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물리학적 의미로 읽어주면 되거든요. 생성과정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는 부패의 과정을 수반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지구화

그래서 좋냐 나쁘냐의 문제를 떠나서 봤을 때 거기 첫 번째 보면, 생산과 교환의 전지구화가 경제적 관계들이 정치적 통제로부터 벗어난, 이 말이 보통 신자유주의를 지칭할 때의 권력의 시장화, 권력이 시장으로 이동한다. 혹은 민영화, 이런 말로 표현되는 것이죠. 혹은 privatization, 사유화라는 말로 표현되는, 경제적 관계들의 어떤 우월성이, 정치적인 관계에 대한 우월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 주권은 쇠퇴한 게 아니냐. 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정치적인 주권은 이행하고 있을 뿐이다. 변화하고 있을 뿐이지 쇠퇴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national한 것에서 global한 걸로 바뀌고 있는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가 정치적 힘들이 부과한 제한과 외부로 해방되었으니 신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최근에 아마 한국 사회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기업들과 기업체들하고 대통령 사이에 환담이 오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오간다. 이런 식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규제에 묶여있던 경제관계들을 풀자. 그래서 투자에 최대한의 자유를 줄 기회가 드디어 왔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설명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여기 서술하고 있는 권력의 주권의 새로운 이행의 한 단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건 노무현 시대에는 안 그랬냐. 그러면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이전 시대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자본의 자유를 보장해줘 왔습니다. 신자유주의화에서 자유화는 전적으로 자본의 자유였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취해온 한에서 결국 이명박의 일종의 전신이죠. 뭘니까. 이제는 물러나게 될 이명박인 셈이죠. 그러니까 전 이명박이 후 이명박이 지금 자리를 교체하고 있는 것이지. 뭔가 권력교체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찬양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찬양함은 대체로 신자유주의화를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 상태겠죠(일단). 덜 규제되고, 징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행보를 할 수 있을 터이니깐.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냉혹한 자본주의적 이윤논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에 맞서는데 필요한 제도적 통로들이 막혔다. 이게 사회민주주의 입장에서 평가이죠. 복지국가 혹은 사회민주적인 유럽에서는 어쨌건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단합을 통해서 권력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의적인 창구들이 많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노사정위원회인데, 이 노사정위원회적 방식이 아마 한국 같은 경우 김대중 정부 하에서 시도가 되었지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죠. 끊임없이 민주노총하고 대기업들은 부딪혔고.

근데 유럽의 좌파논리들은 지구화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바로 그거는 지금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죠. 대의제의 붕괴라는 이유에서 지구화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유럽헌법을 만들자고 하는 주장에서도 반대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런 반대의 논리가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걸 대체로 대의 기능의 마비를 통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태도이겠죠.

그런데 예컨대 그러한 대의가 원활하게 돌아갈 때조차 아무런 수혜를 받지 못했던 즉, 자기를 대의할만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구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는 사회민주주의 태도에서는 누락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네그리가 보장노동자들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말한 건 이 때문이죠.

그래서 4대 보험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왔던 사람들이 지금 지구화가 나쁜 것이다. 라고 하게 되는데, 보장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럼 어떨까. 이거는 문제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민족국가의 얘기로 넘어갑니다.

▲민족국가에서의 권력이행

민족국가라고 하는 게 점점 종래에 지녔던 자신의 권력, 그거를 상실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죠. 특히 초국적 기업, 여기 지금 두 번째 층의 첫 번째 단계에 위치한 초국적 기업들의 경우, 국가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비판적이죠.

그래서 한국의 좌파운동의 기본적인 주장중에 하나가 재벌에 대한 규제, 재벌의 민주화였잖습니까. 박정희 정권 또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까지 이어져 온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변함이 없었던 재벌의 독점권, 이것을 일단 해체시키자.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 주장이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미친 효과는 그 주장을 한 사람들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IMF위기를 겪으면서 해외자본들이, 초국적 자본들이 국내로 쳐들어오는 것을 쉽게 해주었거든요. 왜냐 하면, 국내의 재벌들은 정치권력하고 유착되어서 보호를 받으면서 커왔는데, 재벌들을 규제한다고 하는 거는 국가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었어요. 국가규제를 완화시키다 보니까 초국적 기업들에게 차별을 부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관세장벽이라거나 안으로 국내에 들어와서의 투자의 제한이라거나 이 모든 면에서 초국적 기업들에게 활동의 자유를 열어주게끔 소위 재벌민주화론은 작용을 했습니다. 재벌 민주화론이 신자유주의화에 모터를 달아준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재벌이 일시적으로 약화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한 2,3년간 김대중 정부에서 크게 약화되고, 그때에 삼성을 갖게 된 자동차가 뭘니까. 크라이슬러가 삼성을 갖게 되었습니까? 아, 르노. 르노삼성. 그 다음에 대우하고 GM하고, 그러니까 GM에게 문을 열어준 거죠. 대우가 그 하위기업체로 들어가는 거죠. 삼성이 르노의 하위기업체로, 이런 식으로 한국의 재벌 기업들이 이 레벨에서 국내에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

어지게 되었던 거죠.

물론 지금의 한국 기업들은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의 적응과정, 자기네들의 소유지분의 확대라거나 그걸 재벌의 건실화라고 자본가들이나 권력은 부르지만 그런 건실화 과정을 겪어가지고 지금은 삼성이나 현대가 거의 초국적 기업화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밀렸던 과정에서 지금은 다른 상황으로 다시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건 일국의 규제라는 것에 대한 초국적 기업들의 태도는 대단히 비판적이고 자본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국적 기업의 활동 자유를 보장해주는 과정은 한국에서는 자본의 자유화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민주화로 나타나거든요.

그 이전의 국내 기업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거나 이런 걸 통해서 노동자들을 초과 착취했음에 반해 초국적 기업들은 이미 그 발생지에서부터의 민주적 훈련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전근대적인 노동 규율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국내 기업들에 비해서는 더 좋은 보장을 해주면서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화가 민주화를 수반하면서 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하튼 민족국가들의 주권의 쇠퇴에 이거는 신자유주의 과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족국가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느냐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다시피 국민국가들, 민족국가들의 연합체, 이게 강하거나 약하거나 간에 엄연히 제국 네트워크 권력의 마디로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자유주의화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부터 시장으로의 권력의 이전이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전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권력에서, 민족국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민족국가가 오히려 정부로부터 시장으로의 권력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가정은 한편에서는 민족국가 주권의 쇠퇴로 나타나지만 이 쇠퇴과정에서 민족국가 그 자체 혹은 국민국가 그 자체는 아주 뚜렷한 행위자로서의 과정의 역동적 행위자로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국가가 소멸한다거나 그러한 것과 혼동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